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개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이 충남 발전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 · 대한국토도시학회 전라북도지회 공동주최로 1월 28일 오후3시 전주월드컵컨벤션 센터에서 전북지역 신행정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 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는 성태규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 정철모 교수(전주대), 서희석교수(원광대)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환교수(호원대)등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성태규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 설문조사에서 결과를 보면 국가정책과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재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특별시 대안, 행정중심도시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며 “만일 현실적인 이유로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면 행정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행정수도에 가장 근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철모교수(전주대학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가 신국토구상 패러다임의 근간이 되는 행정중심도시의 추진은 분권형 지방화를 전제로 한 최적 안으로, 이를 계기로 분권형체제로 부응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주체들의 지역혁신활동을 위한 보다 자주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의 존적인 전략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휘석교수(원광대학교)는 “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으로의 분권만을 강조하여 지역내 불균형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며, “광역단위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점성장론이나 특정대학에만 특혜가 집중되는 방안등은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을 심화하여 지역내에서의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환 원광대교수, 안국찬 전북대교수, 엄수원 전주대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편집국장, 이병렬 우석대교수, 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현재의 판결에 따라 후속대책 모색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하루 빨리 신행정수도가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충남역사문화원(원장 정덕기)는 2월 1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沈大平 도지사, 예산군을 비롯한 6개 시·군 내포지역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지역향토인사 등 5백여명이 운집한 한가운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내포(內浦)라는 의미는 조선후기 지리학자인 이증환이 택리지에서 지칭한 가야산일대 10고을, 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밝힌 홍주목이 관할하는 20여개 고을을 지칭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가 충남 서북부지역인 서산·보령시와 홍성·예산·태안·당진군 등 6개 지역 955km<sup>2</sup>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오석민 전시유물부장(충남역사연구원)이 '내포문화권 개발의 역사·문화적 의의'라는 주제로, 박철희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차미숙 전문위원(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주제발표를 통해 오석민 부장은 “내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조사의 시행이 필요하다” 며, “이와 함께 자연간의 연계효과, 관련 문화 콘텐츠의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철희 책임연구원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9백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천7백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8천여명으로 추정되며, 2013년까지 누적 관광수입은 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를 위해서는 내포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정비를 통한 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미숙 전문위원은 “내포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추진 체계, 사업비의 계획적인 투자·조달 및 연계사업 투자촉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내포지역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선 김경옥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조장하, 충남도 건설정책과장, 최봉일 예산군 기획감사실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정강환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주제논문과 관련한 자신의 내포비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원장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앞으로 충남역사문화원과 함께 내포지역이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덕기 역사문화원장은 “내포문화권 개발의 성공여부는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이라며, “정확한 정비 및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沈大平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내포문화권은 백제문화권과 더불어 충남문화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지역에 꽃 피웠던 찬란한 문화의 실체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충청권 지역혁신 촉진 방안” 세미나 개최

충남도와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2월 24일 오전10시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혁신협의회원, 관련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충청권 지역혁신 촉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결정, 대덕R&D특구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에 따라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혁신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지역혁신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가해 지역혁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명교수(한남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청권 지역혁신 촉진방안”에 대해, 박종찬교수(고려대)는 “충남의 지역혁신 체제와 지역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주제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신동호교수(한남대), 한인수(충남대)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이어 조택희 책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의 “충청권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강영주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은 “대전R&D특구 지정에 따른 충청권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논문 발표가 있는 후 이광희 전문위원(행자부 전자정부전략기획실), 임성복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지역경제학회 홍기용회장은 “충청권이 변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도해 지역경제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충청권 3개 시도가 상생발전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